

# 이재명 '정치생명' 15일 사실상 판가름난다

### 서울중앙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예정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혁신회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100만명 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이 오는 15일 사실상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5일 나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기소 후 2년2개월 만에 나오는 1심 법원 결론이다. 검찰은 이미 이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다. 김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하나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경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다.

이대표는 2개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대표의 다른 재판에 비해 유무죄를 가장 치열하게 다투볼 만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기억을 입증,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과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 탄원 촉구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과 전국지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죄가 나올 경우 관건은 형량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이대표는 의원직을 물론,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

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공판을 앞두고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예고하는 등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끝

어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 野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 복귀 논의

### 전공의 단체·야당 없이 가동... "실효성 의문"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의 단체가 빠진 가운데 가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서 협의체에 보고

### 尹 "국민 뜻 4+1 개혁 혼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

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전공의와의 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 데 대해서는 "일단 첫걸음을 뒀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김윤덕 의원,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사진)은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증액 요구안에 따르면 문제인 정부 시절 100억원대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됐다. 2024년 85억원, 내년 2025년 예산안 역시 85억원으로 동결된 것

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며 "이는 사실상 내년 예산에서 2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



성이 잘 드러나 있다"며 "전국지가 지역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결국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 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

### "주가지작·명태군 게이트 등 국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작

의혹과 명태군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군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3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였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 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